

서울시교육청 추경 절반 삭감... 학력진단평가 예산은 증액

시교육청, 3.7조 규모 추경안 제출 시의회 “70%가 기금전출금... 과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40일 이상 씨름 중이던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2744억원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3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한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절반 가량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교부금 2조4561억원과 서울시 추가 전입금 1조

670억원을 합쳐 이전재원 3조5231억원 중 70%가 넘는 2조7043억원을 양대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안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원이 양대 기금 여유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과하다고 판단해

잠정 유보하며 양 측의 진통이 깊어졌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29일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 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 2조7043억원 중 47.1%인 1조2744억원을 대폭 감액했다. 또한 시의

회 삭감 재원 중 80.1%는 내부유보금 1조663억원으로 조정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학력진단평가 예산 30억 증액이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0%를 기금전출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반대해 대폭 삭감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예산은 30억 증액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에 나서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내부유보금 1조663억원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외에도 ▲노후시설개선(1000억원) ▲학교 화변기 교체(392억원)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200억원) ▲노후책걸상교체(99억원) ▲냉난방기개선(591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전자 칠판 설치비(523억원) 전액과 꿈꾸는 연구실 구축지원(10억원),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은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31일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발간' 기자회견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특히 학력진단평가 예산으로 증액된 30억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란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뿐만 아니라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도하며 향상도가 지 평가할 수 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예산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향상도 평가도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며 “학습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는 정서·심리를 검사하는 학습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런 2.0’ 본격화... 사회보장제도 정부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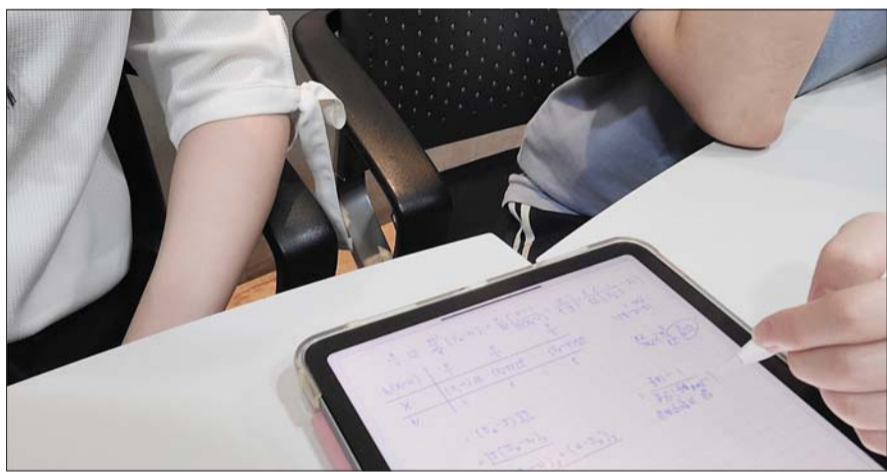
서울시,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어학 등 비교과 콘텐츠 확대 운영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도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시는 정부의 공식 승인 완료로 서울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동력을 확보한 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울런 2.0’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서울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까지 수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강의료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에듀테크 기반의 자체적인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만들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맞



서울런 서비스 이용 모습. /서울시

춤형 학습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런’은 별도 플랫폼 없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7월부터 서비스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는 어학, 자격증, 교양 등 비교과 콘텐츠를 확대하고, 디지털 교

육차자 해소를 위한 코딩 스쿨과 퇴직교사 풀을 활용한 심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8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년간 서울런 시범사업을 통해 약 1만6000명이 교과 콘텐츠, 진로·진학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장학금 많이 주는 대학... 삼육대 수도권 1위

구미대, 전문대 중 최다

삼육대학교가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 중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1위다. 전국의 전문대중에서는 구미대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22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삼육대의 2021년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391만 2563원이다. 재학생 5천명 이상 수도권 일반대학(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포함)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국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333.5만원보다 약 58만원, 수도권 대학 평균 329.8만원보다 62만원가량 많다. 삼육대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이 774만 8262원인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

원되는 셈이다.

구미대는 지난해 학생 1인당 48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전국 전문대 137개대학 중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재학생 2500명 이상 기준 대학 전국 1위에 올랐다.

137개 전문대 평균 1인당 연간 장학금은 353만원이지만 구미대는 연평균 등록금(575만원)의 84.3%를 장학금으로 지급, 학생 1인당 실질 등록금 부담이 100만원 이하였다. 장학금 수혜의 폭도 넓어 재학생 95%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구미대는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장학금이 등록금의 70%를 넘었고 최근 4년간은 81~84%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미대는 국가장학금을 비롯 면학장학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 30여 종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 손질

중심지 기능 복합화 실현 등 목표

서울시는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합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우선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 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를 통해 시는 동대문을 ‘뉴티·패

션사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심부 외 영등포·신촌·성수·봉천 등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또 시는 도심부 녹지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한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에 90m 이하로 설정됐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가동

경기도는 2030년까지 30개 시·군이 달성해야 할 하천 목표 수질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도는 지난 31일 도내 30개 시·군이 제출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시군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총량을 토대로 수립되는 일종의 하천 오염물질 관리 계획서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담게 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없다... 1심 패소

전대넷, 사립대·국가 상대로 소송

대학생 단체가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들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대학생 2697명이었으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교와 정부다. 전대넷은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던 그해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신하은 기자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비대면 수업 전과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학교는 온라인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과거 사용했던 강의를 다시 사용하는 등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내 시설이나 행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신하은 기자